



‘KT 스마트공장 투자조합 결성총회’에서 한국벤처투자 김형철 심사역(왼쪽에서 세 번째), KT 인베스트먼트 김지현 대표이사(왼쪽에서 네 번째)가 주요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

## 스마트공장 벤처 전폭지원

### KT인베스트먼트, 투자조합 결성총회

KT그룹의 벤처 투자 전문 자회사 KT 인베스트먼트는 서울 종로구 율곡로 사옥에서 ‘KT스마트공장 투자조합 결성총회’를 열고 스마트공장 분야의 투자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KT인베스트먼트는 올해 7월 중소 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모태펀드의 ‘스마트공장 펀드 출자사업’에 지원해 펀드 운용사로 최종 선정됐다. 앞으로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우량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해 모기업 KT와 함께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KT인베스트먼트는 2015년 9월 설립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IT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에 집중해 왔다. 지난 2017년에 KT인베스트먼트가 30억원을 투자해 육성한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 ‘수아랩’은 지난달 미국 머신비전 전문기업인 ‘코그넥스’에 인수됐다.

이 과정에서 KT인베스트먼트가 투자금의 약 4배를 회수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 부동산정보를 제공하는 앱 ‘호갱노노’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인수돼 단기간에 투자금 대비 2배 이상의 수익을 회수했다.

KT인베스트먼트 김지현 대표이사는 “현재 보유한 우량 포트폴리오의 성과 또한 상당히 기대되는 상황으로 펀드 규모와 투자 전문 인력 등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인 기자 silkn@

## ‘한돈의행복’ 브랜드로 국내·외 시장 공략

### 금돈 돼지문화원-영월 비제이푸드

강원도 원주의 금돈 돼지문화원과 영월의 비제이푸드가 최고 품질의 돼지를 재료로 안심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손을 잡았다.

두 회사는 ‘한돈의행복’ 브랜드도 만들어 국·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해나가기로 했다.

금돈 돼지문화원과 비제이푸드는 지난 6일 강원도 원주 돼지문화원 세미나실에서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3자가 참여하는 ‘동반성장 트라이앵글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업은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한 공정한 계약 체결 ▲



‘한돈의행복’ 브랜드 관계자들이 지난 6일 강원도 원주 돼지문화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돈 돼지문화원, 비제이푸드

합리적 거래 기회 보장 ▲기술협력 및 인력양성, 동반성장 협력 ▲상생 발전에 필요한 판매, 생산기술 및 원가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 中企인들, 사랑의 기부릴레이 이어져

### 기업 3곳서 중기재단에 성금 전달

중소기업인들의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사무기구 전문기업 코아스 노재근 회장, 공조시스템 전문기업 새한공조 박승균 대표, 의류제조업체 나인 이희건 대표가 1000만원씩의 성금을 재단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코아스 노재근 회장은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를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이끌어온 이후 2017년부터 다시 연합회장으로 선임된 금속가구업계의 대표적인 리더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공조시스템 관련 특허 5건, 국외특허 1건 등 다양한 기술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1000만원을 기부한 새한공조 박승균 대표(오른쪽)가 김영래 중기 사랑나눔재단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력을 보유한 새한공조를 운영하고 있는 박승균 대표는 춘천회계농공단지협의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도시에 위치한 중소기업계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 박영선, AI·제조데이터 첫 전략위원회 참가

# “D·N·A 코리아로 제조업 혁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 정부, 내달 AI 제조혁신 로드맵 발표

미래먹거리 예산 총 114억 확보  
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에 투입

정부가 12월 중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제조혁신 로드맵을 발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약 20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AI·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와 4개로 구성된 분과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키로 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을 위해 67억원, 스마트센터 연구개발(R&D)을 위해 47억원의 예산을 각각 확보해 내년에 본격 집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박영선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AI·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를 열고 관련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위원회에는 차관급인 중소기업옴부즈만을 역임한 숭실대 김문경 교수를 비롯한 학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정부 출연기관, 삼성전기, KT,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등 업계 관계자들이 두루 참석했다. 위원장은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 혁신실장이 맡았다.

박영선 장관은 “DJ정부시절 구축했던 초고속 인터넷망이 IT 강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베풀목이 됐듯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문재인 정부도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미래세대를 위해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의 기반을 깔았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AI·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왼쪽 6번째)이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분과로 꾸려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달 중 AI 기반 제조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내년도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등 올해 안에 현 정부의 ‘데이터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민간이 해야 할 AI제조 데이터센터를 왜 정부가 주도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기업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중소벤처기업은 자본이 부족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부가 이들을 위해 플랫폼을 깔아주고자 한다.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데이터바우처를 통해 (정부가 만든 데이터센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고성능 컴퓨팅 자원 및 AI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는 AI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구축(5년간 3360억원), AI·5G 기반의 스마트공장 구축 등 공급기술 고도화를 위한 R&D(5년간 9500억원)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각각 추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경제 활성화’ 지자체 재정집행 추진 올인

### 당정, 중앙 97%, 지방 90% 목표 “집행위해 가용수단 총 동원할 것”

당정(여당·정부)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집행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한다. 이월·불용액 최소화로 내년도 재정 확장과 경제 활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의 재정 집행율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 후 “올해 예산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10월까지의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연말 까지의 재정집행 관리 방안과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의 본예산 집행실적은 지난달 40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예산 475조6000억원 중 85.0%를 집행했다.

##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

2019. 11. 7.(목) 07: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 정책위원회의실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같은 기간까지 5조원을 집행했다. 5조8000억원 중 86.6%를 집행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가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재정 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고위급·실무급 간담회와 협동 현장점검 등을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집행 장애요인을

풀고, 기획재정부와 타 중앙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보조사업은 각 중앙부처가 책임지고 지자체 현장에서의 실집행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중앙정부가 교부한 보조금은 지자체가 집행해야 재정지출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서울·경기 등 예산 규모가 크지만, 집행률이 평균 미만인 지자체는 더욱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하겠다는 방침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